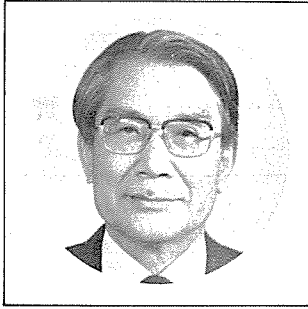


科學과 社會의 幸福



洪 文 和
〈서울대 명예교수〉

1 해가 바뀔 때마다 送舊迎新의 감회가 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지나간 한해는 21세기를 여는 마지막 10년의 첫해였다는 점에서 뜻이 크다.

多事多難했던 격동의 한해를 보낸 지난 1년을 회고해보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개방과 개혁의 세계조류가 한반도에 밀려들기 시작하여 그와 같은 우리의 북방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시화된 역사적인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하여 한반도가 결코 극동의 보잘것 없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재편되는 세계질서에 있어서 하나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론이 통일되고 우리 모두가 각자 책임을 지고 질서를 잡는데 앞장을 서는 동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민주화 정착이냐 남북통일이냐 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중구난방식으로 조급하고도 감상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도리어 혼란만 가중되는 사태도 초래될 우려가 있다. 지나간 1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혼란들이 그와 같은 짧은 소견과 조급한 시행착오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침착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계만 하더라도 1980년대의 급성장과는 달리 세계 선진국들 대열에 참여하여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술과 자본 또는 경영기법등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외국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虛張聲勢나 조급한 미봉책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실력을 든든하게 하여 處變不驚하는 태세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개방화시대에 대비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이미 노동력 주도형시대는 지나가고 기술혁신에 의하여 산업계를 이끌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동안에 아세아의 龍으로 까지 성장된다는 과학과 기술의 공헌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덕택임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우리의 놀라운 과학 기술의 발전정책은 발전도상국가들의 교과서적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小成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부터 본격적인 과학기술의 大國이 되어야 할텐데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보면 자만과 안이에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가 서로 공명심만 앞세우는 경향은 없었던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동안의 신문문치를 들쳐보면 허다한 세계적인 기술개발과 발명발견이 대서특필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과학연구를 늘리고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발명이나 노벨상을 들먹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과학과 기술계도 이제는 어엿한 성숙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좀더 의젓하고도 침착하게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발명발견에는 어느 정도 우연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자본을 부어넣어서 조성된 과학계의 저력과 관록이란 사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에 대한 영특성을 크게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긴 眼目으로 과학기술계를 육성하는 장기계획도 아울러 필요한데 과학기술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장관이나 연구기관의 관리직책들이 단명하게 경질되는 현상은 아쉬운 일이다. 한동안 문제가 되던 해외 과학자의 브레인·드레인 문제도 올바른 시책의 덕택으로 해결된 것까지는 좋은데, 귀국한 과학인들에게 성급한 기대를 거는 나머지 직장이나 직책의 안정성이 미흡하여 인재가 올바르게 활용되지 못하는 듯한 감이 없지 않는데 필자의 편견이기를 바란다.

원자력을 제3의 불이라고까지 형용되고 있
3 는 오늘날, 핵에너지의 이용을 위험성만 앞세워서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은 과학시대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自明한 이치를

모를 사람은 없을텐데도 지난번의 「安眠島事件」 같은 불상사가 야기되었다는 것은 과학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상처를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와 같은 극한 상태의 의사표시에까지 이르렀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존·버틀러도 지적한 바 있지만 高度의 消費를 목표로 하는 산업사회의 실현만이 인간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였다. 선진국가보다도 국민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으면서도 행복한 지역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좋으나 그 반면에 사회경쟁이 격화되고 직무의 본질이 개인적 긍지나 보람보다도 기계문명의 부속물적인 단조로운 일의 반복인 경우가 많다. 매스컴은 소비의 쾌락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광고나 오락물도 충만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환경가운데서는 각자의 소망과 달성, 현실과 꿈 사이의 모순과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사회에는 단순히 경제적만이 아닌 목적이나 가치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人間의 問題」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의 핵폐기물처리로 야기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과학은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는 과학을 이해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의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면 「轉禍爲福」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그와 같은 사태가 생겼을때 그 많은 과학자나 사회학자나 언론계가 있으면서도 왜 해설이나 중재나 조정 역할을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다행히 새로운 과기처장관이 과학과 사회를 아울러 달관할 수 있는 시야를 지닌 분이라고 하니 과학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